

4 지방재정 분권화 촉진

- 지방재정 확충 지원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과제 발굴·검토*
*예 : 향후 지방소비세의 효과를 분석하여 지역간 세수균형 확보, 규모 확대 등을 논의
- 유사중복사업 통·폐합, 타 회계에 분산된 지역사업의 「광역·지역발전특별회계」로의 이관, 지역에 맡길 사업은 재원과 함께 지방에 이양(장기 검토)하는 등 포괄보조금제도를 지속 보완
-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활용, 지역사업에 대한 지방정부 책임성도 강화

5 지역성장 역점사업 성과 가시화

- 금년 중 80개 공공기관 이전청사 착공 및 이전지원대책 수립 등 지방이전 본격 추진
- SOC, 수질 개선 및 방조제 명소화 사업 등 새만금(아리울)사업을 착실히 추진
- 「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(11~13)」에 따라 시설·운영비, R&D 등에 11조원 투자 예정
- 광역경제권 주요거점을 KTX망으로 연결, 장차 전국을 하나의 권역으로 통합
- 「접경지역지원특별법」이 제정(11.4)됨에 따라 조속히 종합계획을 확정, 접경지역을 생태·평화벨트로 육성

4. 광역경제권의 미래상

- 향후 선진국의 거대 광역경제권과 경쟁하고 국가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글로벌 광역경제권* 구축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
*최소 인구 1천만명 이상의 지역으로 글로벌 수준의 경쟁단위로 구성
- 현재의 5+2 광역경제권을 토대로 시장기능에 의한 권역간 연계를 고려한 글로벌 광역경제권 구축 가능
* 예 : 수도권·충청권·강원권을 포괄하는 중부경제권, 호남권·대경권·동남권을 포괄하는 남부경제권, 제주권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특별경제권

**제2기 지역발전위원회는
5+2 광역경제권 발전 기틀을 확립하겠습니다**

1. 왜 광역경제권인가?
2. 지난 3년간의 성과와 보완할 점은?
3.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
4. 광역경제권의 미래상

1. 왜 광역경제권인가?

▣ 대한민국 지역정책의 변천과 주요국의 동향

- 60~80년대 산업화 시대에는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, 90년대 세계화 시대에는 첨단산업 등이 수도권에 집중, 2000년대 지식기반 시대를 맞아 새로운 지역정책이 요구됨
-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광역경제권 정책을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고 수단으로 인식하고, 대도시를 중심으로 권역내 도시간 네트워크를 추진
※ 프랑스 Grand Paris, 미국 Mega Region, 중국 3개 광역경제권 등

▣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

- 세계적 추세에 맞춰 5+2 광역경제권 정책을 추진
- 광역화, 특성화, 분권화 등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

2. 지난 3년간의 성과와 보완할 점은?

① 광역경제권 기반 확립

- (성 과) 12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(9천여 억원 지원), 20개 대학에서의 광역경제권 인재 양성사업(3천 억원 지원), 30대 선도프로젝트('09~'13년간 총 50조원 투입 계획) 등을 착수
- (보완할 점) 선도산업에 대한 광역경제권 차원의 성과 체감이 미흡하고, 인재양성사업은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의 적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보완이 필요

② 지방재정 확충 및 자율성 제고

- (성 과) 지방소득세·소비세('10년 2.1조원)와 지역상생발전기금('10~'19년 총 3조원)을 신설하고,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
- (보완할 점)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이 미흡하고, 일부 유사 중복사업도 존재

③ 4대강 살리기 사업 착수

- (성 과) 우리 국토의 江山改造를 위해 4대강 본류는 금년도 완공 예정
- (보완할 점)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류 개선을 통한 성과 확산이 필요

④ 각종 국책사업 추진

- (성 과)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승인(154개)하고, 첨단의료복합단지(대구 신서, 충북 오송) 조성계획을 확정하였으며, 경제자유구역(3개) 및 국가산업단지(5개)도 추가로 지정
- (보완할 점) 국책사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가시화가 필요

3.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

①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내실화

- 1단계('09~'11) : 지방기업에 대한 밀착된 지원을 통해 정책효과를 가시화
- 2단계('12이후) : 1단계 사업을 보완 발전시켜 정책의 완성도를 제고
 - 광역 선도산업이 시·도 전략산업의 일부를 흡수, '선도전략산업'으로 재편하여 사업 추진상의 혼선을 제거하고 시너지 효과를 제고
 - 뿌리산업·부품소재 등 현지 고용창출형 산업을 선도산업에 추가하여 지원하고, R&D와 고용의 연계시스템도 구축하며, 기업체감형 지원을 강화
 -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, 산학협력을 강화해 지역 우수 인재의 권역내 기업 채용을 활성화

② 30대 선도프로젝트 본격화

- 신규 착공 예정 사업은 관련 절차를 밟아 조속히 착공하고, 완공 예정 사업은 적기에 예산을 투입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30대 선도프로젝트 점검단을 구성하여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

③ 초광역개발권 정책 구체화

- (내륙권) 상반기 중 기본구상 확정, '12년 시범사업 착수를 목표로 관련 종합계획을 마련
 - 백두대간권(설악산~지리산)은 국민 화합을 실현할 수 있는 명품 생태 네트워크로 조성
 - 내륙첨단산업권과 대구·광주권은 각각 바이오·부품소재와 서비스·光산업 등을 중심으로 협력사업을 지원
- (해안권) 초광역권 연계협력 시범사업(섬진강 테마로드 등)을 착수하고, 파급효과가 큰 선도사업(거제도 지세포 해양레포츠 단지 등)의 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